

## 2장 유럽통합의 사상적 배경 -노명환

유럽통합 사상은 여러 동기와 목적으로 유럽을 통합하고자 하는 사상이다. 본 장에서는 유럽통합 사상을 제1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유럽통합을 하고자 하는 여러 동기와 목적을 설명한다. 유럽통합사를 분석할 때 때로는 이 여러 사상들의 어느 하나가 돋보인다. 어느 하나가 중요한 추진력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어느 하나만을 유럽통합의 본질로 이해하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자기가 만지는 부위가 코끼리의 본질이라는 인식을 갖듯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유럽통합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유럽통합사에서 나타나는 유럽통합 사상과 운동의 제 양상과 국면들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통합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볼 때 유럽인들은 평균 25년 만에 한번씩 전쟁을 하던 역사를 벗어나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서 70년의 세월이 가까워지는 오늘날 까지 한차례의 전쟁도 치루지 않고 현재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전쟁의 비극을 겪으면서 유럽의 평화공동체를 구상하고 실현하고자 한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유럽인들이 전쟁에 대한 기억 속에서 평화를 위한 정체성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유럽통합 사상과 운동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본 장에서 이 측면을 자세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 1.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유럽통합운동의 동기와 배경

#### 1-1) 외부로부터의 유럽 보호

유럽인들은 8세기에 이슬람세력의 침략을 받았고 그 뒤로도 끊임없이 이슬람 세계로부터의 침략 위협에 시달렸다. 이러한 가운데 그들은 공동으로 유럽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유럽인의 정체성은 바로 이 이슬람세력과의 대결 구도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지적한다. 711년 이슬람세력이 이베리아 반도에 침입해 오고 732년에는 피레네 산맥을 넘어 프랑크왕국으로 쳐들어 올 때 자신들을 기독교 유럽인이라 느끼면서 공동의 운명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중세를 지나 근세에 이르러 유럽통합 주장이 대두되는데 이 주장들은 바로 이러한 경험들에 기초했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유럽통합 사상의 시발점은 바로 이슬람세력

에 대항한 생존과 안녕을 위한 유럽체제의 구상이었다. 십자군전쟁은 유럽인들에게 매우 공포스러운 경험이었다. 오스만터키의 콘스탄티노플 점령과 발칸반도 유린, 신성로마제국의 수도인 비엔나가 세 번씩이나 포위당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유럽인들은 이슬람세력의 위협을 더할 나위 없이 크게 느꼈다. 이러한 경험들이 축적되고 그 위협감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와 비례해서 유럽통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그만큼 더 두터워졌다. 다른 한편에 유럽인들은 동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침입, 예를 들어 훈족 및 몽고족의 침입을 겪으면서 또한 유럽통합의 필요성을 주창하기도 하였다. 황인종으로부터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즉 소위 황화사상에 의거해서 유럽인이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04년에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에 패했을 때 유럽통합을 외치는 목소리가 대단히 높아졌다. 황인종인 아시아 일본에게 백인의 유럽 국가 러시아가 패배한 것은 큰 충격이었다. 다시 한번 황화사상을 되새겼다. 러일전쟁이 진행되던 시기에 동북아 지역에서는 동북아 삼국인 한국, 일본 중국의 제후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러일전쟁과 관련하여 유럽과 동북아의 각 지역에서 통합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1898년 미국과 스페인간의 전쟁에서 미국이 스페인을 제압하면서 같은 문화의 뿌리인 미국에 대해서도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앞으로 강력해질 아메리카 대륙에 대항해서 유럽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 되었다. 이 전쟁은 유럽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는데, 이는 아시아에서 갖는 유럽의 경제우월권에 미국이 도전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많은 유럽인들은 스페인의 패배를 유럽인의 패배로 인식했고, 이 전쟁을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숙명적인 대결의 전조로 보았다. 유럽통합의 추구자 들은 이 불길한 징후는 주권국가원칙이 뿌리내리고 있는 유럽의 불안정성과 반면 연방주의가 자리잡고 있는 미국의 우월성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유럽인들은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들어선 공산주의 정권에 대항해서 서유럽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산화된 소련연방공화국이 수립되자 서유럽은 공산주의 확산에 대한 더욱 강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이때부터 반공 정서는 유럽통합의 한 추동력이 되었다. 반공으로 인해 같은 유럽인 러시아가 위협 대상국이 되었다.

## 1-2) 세계중심으로서 유럽의 유지와 유럽 각국의 패권 경쟁

그런가 하면 유럽인들은 세계의 중심으로서 유럽을 유지하기 위해 유럽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유럽통합을 유럽의 제국주의 세력들이 연대하여 세계 중심으로서 유럽을 지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보았다. 달리 말해, 유럽통합을 유럽이 해외 식민지를 계속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하였다. 이는 유럽인들이 국가 중심으로는 더 이상 유럽이 세계의 중심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각국은 이렇게 통합되는 유럽에서 패권을 쥐고자 하였다. 통합되는 유럽에서 패권을 잡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경우 유럽통합은 피를 흘리지 않는 유럽정복의 수단이 될 수 있었다. 나폴레옹은 일찍이 유럽 국가들을 정복하여 프랑스의 지배아래 통합하고자 하였다. 유럽통합은 그에게 있어서 프랑스의 유럽 지배를 영구화 하는 수단이었다. 이렇게 프랑스가 지배하는 유럽을 세계의 중심에 견고히 서있게 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유럽통합이라는 방법을 통해 프랑스의 패권을 견고히 하는 것 이상은 아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후에 독일의 비스마르크 수상은 유럽 국가들이 유럽의 이름을 빌려 자국의 이해를 꾀하려고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은 유럽통합의 동력에 관한 현실주의 입장을 뒷받침해 준다 하겠다. 현실주의 입장은 유럽통합은 국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본다. 그런데 이러한 제국주의 각국의 패권 경쟁은 진정한 유럽통합을 추구할 여가를 주지 않았다.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더욱 확대 발전하면서 유럽 각국에서 경제력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유럽은 겉으로 드러나는 전쟁의 승패보다도 구조적인 자본주의 경쟁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대로 점차 진입해 들어갔다. 자본주의 발전에 적응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존립 내지 패권의 가능성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유럽 주권국가들의 식민지 획득을 위한 경쟁은 전쟁의 형태로 표출될 국면에 이르렀고, 그 구체적인 표현이 독일의 3B정책과 영국의 3C정책의 대립, 프랑스의 아프리카 횡단정책과 영국의 종단정책의 대립, 그리고 파쇼다 사건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세력은 팽창하는데 유럽은 유럽 내부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리라는 불안감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의 발전은 유럽의 민족국가 정책들 사이의 기본적인 갈등을 촉진.심화시켰다. 미국.러시아 특히 일본이 멀지 않은 장래에 유럽의 심각한 경쟁상대로 나타날 조짐이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870년대 말에는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하는 서유럽과 중유럽을 횡단하여 관세동맹을 형성하자는 제안들이 나왔다. 스위스의 법률가 브룬첼리(Johann Bluntschli), 독일의 외교관 프란츠(Constantin Frantz) 그리고 프

랑스의 법률가이며 정치학자 푸르(Louis Le Fur)는 유럽통합의 대의를 실제적인 정치학적 차원에서 학문적으로 정립하고자 했다. 독일태생의 영국사업가 뵘처(Max Waechter)는 유럽국가들의 경쟁과 반목이 비용이 많이 드는 그리고 위험스러운 군비경쟁을 부추이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경제적, 도덕적 위상을 경감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나 이탈리아 왕자 카사노(Cassano)같은 실력자들에게 유럽협조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등 현실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점점 이러한 기업가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었다. 이탈리아의 크리스피(Francesco Crispi)나 독일의 카피리비(Leo Capirivi)와 같은 정치가들도 유럽통합의 대의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유럽통합의 대의가 이렇게 실력을 갖춘 정치·경제·사회의 지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게 되는 것은 유럽이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흔들리는 유럽의 위상에 직면하여 단결 필요성이 대두될 때임을 의미한다 하겠다.

### 1-3) 유럽 내부의 전쟁방지, 평화와 인권 정착을 위한 유럽통합

1618년부터 1648년에 이르는 30년 기간의 전쟁 동안 유럽인들은 전쟁의 비극과 인권부재의 상황을 극심하게 겪었다. 이는 유럽인들로 하여금 평화정착의 방안을 절실히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과 함께 30년 전쟁이 끝났을 때 주권 국가를 단위로 하는 유럽의 국제 질서가 자리잡게 되었다. 이로부터 장기적으로 점차 강력한 국가주의 또는 민족주의가 심화되어 갔다. 많은 유럽의 선각자들은 이것이 유럽을 끊임없는 전쟁으로 몰아갈 수 있고 인권부재의 상황을 반복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갖는 유럽인들은 전쟁을 막고 평화와 인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유럽통합을 주창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생시몽(Comte de Saint-Simon), 위고 (Victor Marie Hugo) 등을 들 수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장발장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회소설 레미제라블의 저자 위고는 19세기 중반 유럽 내에서 전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유럽합중국 창설을 제안했다. 그는 유럽합중국 창설을 통해 유럽 국가들 간에 치루어지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주창했다. 그는 전쟁준비와 수행을 위해 소진하는 인력과 재원을 사회와 인권을 위해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궁극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 (Immanuel Kant)는 국가주의를 극복하고 세계정부

를 구성함으로써 세계의 영구평화를 실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사상들은 평화와 인권을 위한 유럽통합이라는 방안에 큰 줄기를 이루었다.

#### 1-4) 유럽정체성의 구성 노력

유럽통합을 추구하는 많은 유럽인들은 그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유럽인의 정체성(identification)을 공고히 하고자 노력했다. 그들은 유럽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유럽문명의 구성 요소를 성찰하면서 그들이 공유했던 또는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문화를 들추어내어 조명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들은 특히 헬레니즘 문화 전통과 기독교문화의 공동유산에 주목했다.

그들은 먼저 그리스·로마의 고전 문화가 유럽인들을 위해 갖는 의미를 성찰했다. 그러면서 이 고전문화가 중세시대 (Middle Ages)를 넘어 재생되면서 소위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던 것에 주목했다. 그들은 또 카롤링거 시대의 중세에 이미 카를 대제가 라틴어 연구와 교육 등 고전·고대 전통을 유럽 적인 차원에서 천착했던 활동에 주목했다. 르네상스 시대에 고전·고대 문화가 유럽적인 차원에서 꽃피우면서 유럽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은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에라스무스로 대표되는 유럽적인 차원의 지성인들에 주목했고 지식인들 사이에 그리스어와 라틴어 교육이 확산되었으며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들이 폭넓게 학습되었음을 인지했다. 그들은 유럽인들이 바로 이 고전(classics)의 학습을 통해 지역적인 차이를 넘어 공동의 지적 토양을 갖게 되고 공동 운명체 소속감을 고양시켜 나갔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학자들이 이러한 유럽을 ‘학문공화국 (respublica litteraria)’이라 칭하는데 동의하고 이 학문공화국이 유럽공동체의 중요한 정체성의 토대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유럽의 고전문화 체계는 고대 그리스를 의미하는 헬라스 (hellas)에서 생성된 이래 전 유럽에서 뿌리를 내려 헬레니즘(hellenism)으로 정착되었다고 보았다. 그들은 그리스 문화를 유럽문화의 원류로 이해했다. 그리스 문명이 오리엔트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형성되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졌다.

기독교의 원류는 유대 땅에서 시작되었지만 로마 시대에 유럽에 전파된 이래 유럽은 곧 기독교 세계라는 동의어가 성립될 정도로 강력하게 자리 잡았다. 특히 카를 대제는 그가 정복하는 모든 지역을 기독교화 했다. 유럽의 기독교 정

체성은 강화되었고 이는 유럽을 하나로 묶는 중심 끈이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시 지식인들은 유럽을 ‘기독교 공화국 (respublica christiana)’ 으로 불렀다. 당시 유럽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의 원천은 사제를 통해 듣게 되는 성서의 내용이었으며, 기독교 윤리는 이들의 의식구조를 형성하는 초석이었다. 기독교 윤리는 유럽인들의 생로병사, 관혼상제 일상의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유럽인들의 생활방식의 초석이 되었다. 기독교가 여러 종파로 분열되었지만 궁극적으로 기독교공화국의 정체성을 공유했다. 기독교문화는 유럽인들의 정체성의 주요부분을 구성했다.

유럽통합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카를 대제와 그의 업적은 중요했으며 학문공화국과 기독교공화국은 많은 부분 그와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카를 대제는 유럽공동의 조상으로, 유럽통합의 아버지로 자리 잡아갈 수 있었다. 유럽인들은 카를 대제의 역사와 함께 헬레니즘과 기독교문화를 중심으로 유럽의 정체성을 구성해 갔다. 그들은 라틴어 문화권 전통을 강조했고 에라스무스 (Desderius Erasmus) 같은 지식인들의 활동을 유럽공동의 유산으로 설정했다.

이렇게 유럽통합을 위해서 유럽 공동의 정체성을 구성해 가는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혹자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공동체가 구성되기에는 공동의 정체성 요소가 없다고 말한다. 이것이 유럽과의 큰 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유럽의 정체성도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구성하려는 노력 속에 구성되어 왔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은 유럽통합에 관한 구성주의 이론과 관련해서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우리가 더욱 고민해야 할 점은 헬레니즘의 원류인 그리스가 유럽통합 과정에서 약체회원국으로 가입했다는 측면, 기독교는 유럽의 어느 한 국가에 그 연원을 두지 않는다는 측면이다.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예를 들어, 한자문화권, 유교문화권 등을 지역 공동의 정체성의 원류로 상정할 때 중국이라는 강대국과 지역공동체의 역할관계가 곤혹스럽게 다가온다.

이렇게 유럽인들이 정체성을 구성해 가면서 유럽통합을 이루려는 열정, 즉 유럽합중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신념은 당시 유럽사의 전개에 있어서 주요 원동력으로 자리 매김 될 단계에 이르렀다. 그것이 내부적으로 인간적인 가치를 보장시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열망에서 비롯되었든,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방어 이데올로기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의 복합성에 기인하든 그것은 대단히 괄목할만한 발전이었다. 당시 유럽통합의 대의와 그 운동의 상황을 영국의 한 언론인인 스티드(Willam Stead)는 다음과 같이 매우 흥미롭게 대변해주고 있다: “지금 현재 멀리 보이고 잘 보이지 않는 사건인 유럽합중국의 건설은 실제적인 정치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 이 유럽합중국의 건설을 위해 유럽대륙은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20세기로 가는 문턱에서 우리는 이 최종의 그리고 거대한 사건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당시 유럽의 민족주의, 제국주의 이념은 강했고 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누구도 막지 못했다. 즉,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대세가 강하게 진전되어 가는 시대에 이러한 유럽통합 사상과 운동은 극소수 선각자들의 극히 이상적인 추구에 머물고 말았다.

## 2. 제 1차, 2차 세계대전의 경험과 유럽통합 운동

### 2-1) 전대미문의 전쟁경험과 영구평화 정착 운동

제 1차 세계대전은 이전의 전쟁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면전이었고 전대미문의 대량파괴를 초래하였다. 전투기 등 전쟁 기술의 발전이 그 주 요인이었는데 이 전쟁은 어떠한 그동안의 피땀어린 성취도 한순간에 폐허로 만들 수 있음을 여과 없이 보여 주었다. 그것은 그전의 전쟁에서 느끼던 바와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유럽인들은 이러한 전쟁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유럽의 종말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전쟁에 대한 극심한 공포심을 갖게 되었다. 이리하여 유럽인들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절실히 고민했고 그동안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유럽통합 사상과 운동에 크게 주목했다.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유럽통합 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예를 들어 반전운동가 이면서 소설가인 레마르크 (Erich Maria Remarque)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와 “개선문” 과 같은 소설들을 통해 젊은 이들이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무가치하게 죽어가는 전장을 신랄하게 고발하였다.

이러한 반전운동은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를 반성하고 초국가주의 유럽통합을 이룩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이때부터 유럽인들에게 평화는 이상적인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 실존의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제 1차 세계대전 후부터 전개된 유럽통합 운동의 핵심은 어느 외부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럽의 단결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 전쟁에 반대하면서 평화와 인권을 위한 운동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전의 유럽통합 운동의 동기와 목표와는 크게 차이점을 드러내 주는 측면이었다. 전후에 유럽통합을 위한 목표와 방법론이 심층적으로 이론화되기 시작하였고 그 운동도 보다 크게 체계적으로 조직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 1차 세계대전의 경험은 유럽통합 운동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으로 작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제 1차 세계대전 후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의거하여 국가들의 연맹체인 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이 창설되었으나 유럽통합 운동가들은 이를 비판적으로 보았다. 초국가주의 유럽통합만이 유럽을 위한 대안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영국을 중심으로 초국가주의 연방주의 유럽통합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연방주의자들은 국가를 해체하고 유럽을 하나의 연방 시스템으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유럽연방을 형성함으로써 유럽 내 소수민족 문제를 해결하고, 논란되는 유럽 지역들의 국경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문화 특성을 보존하며 민주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국가 내에 소수 민족문제가 억압을 통해 통합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소수민족이 강제적으로 통합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이러한 억압된 소수민족들을 해방시키고 이들의 자치를 보장하면서 이 모든 소수민족들을 유럽연방으로 묶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등이 각기 독립을 하고 유럽연방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들은 유럽 내 국경분쟁들은 당사자 국가들 사이에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고 유럽차원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유럽 내 지역주의 및 국가주의를 지역 자치라는 관점에서 육성·발전시키고 이를 유럽연방으로 묶어냄으로써 평화와 인권의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오늘날 말하는 지역화(regionalization)와 세계화(globalization)의 동시추구였다. 이들 연방주의자들은 국가주권의 절대성, 신성성의 개념을 극복하고 연방주의를 실현할 때 유럽 지역 공동의 이익과 평화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신념을 열정적으로 표출했다. 그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유럽 공동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문화공동체를 형성시키고 관세동맹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이루어 가며 궁극적으로 유럽합중국 내지는 유럽연방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통합과정과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런가 하면 전통적인 유럽중심주의의 관점에서 평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유럽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운동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쿠덴호브-칼레르기



(Richard von Coudenhove-Kalergi)가 조직한 범유럽연합 (Pan-Europa)이 그 대표적인 유럽통합 운동 조직이었다.

그는 헬레니즘과 기독교를 본질로 하여 유구한 전통을 정립해 온 유럽의 ‘고귀한 문명’이 유럽 각국 민족주의의 각축으로 인해 자멸할 가능성과 소련의 공산주의 그리고 미국의 대량 물질문명으로부터 받을 피해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유럽의 문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범유럽연합의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열정적인 저술 작업과 유럽통합운동을 전개했다. 그는 사회 각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많은 추종자들을 얻었다. 그리하여 당시 유럽통합 운동에는 후에 유럽 각국에서 정치적으로 지도자가 되는 인물들이 참여하였다. 브리앙 (Aristide Briand), 스트레제만 (Gustav Stresemann), 아데나워 (Konrad Adenauer)가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 특히 브리앙과 스트레제만은 각각 프랑스와 독일의 외무장관과 총리직이라는 두 개의 고위 공직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노력에 의해 유럽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로카르노 조약이 1925년 체결될 수 있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페인의 사상가 오르테가 이 가세트(José Ortega y Gasset)도 범유럽연합 운동에 가담했고 『대중의 반란』(*The Revolt of the Masses*)이란 저서에서 유럽연방의 단일국가를 이룰 때만이 유럽인의 맥박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한편 유럽통합 운동가들 중에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영구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소위 기능주의 이론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미트라니 (David Mitrany)는 칸트의 세계정부에 기초한 영구평화 이론과 연계하면서 세계정부를 국가 대표들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각 분야의 대표들로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국제정치학계에서 두고두고 기능주의 이론의 창시자로 자리 잡았다. 그는 경제, 사회 등 각 분야 별로 유럽통합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능주의 관점의 유럽통합 제안은 당시의 유럽통합의 필요성에 주목하는 경제계의 관심과도 일치했다.

제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일부 경제전문가들과 경제인들은 규모의 시장 원리 차원에서 유럽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유럽의 자본주의가 발전되어 온 단계에서 당시가 역내 단일 시장이 형성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인식했다. 그들이 보기에 전쟁을 계기로 교통, 통신, 기술의 발달이 현저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경을 넘나들며 경제행위가 이루어지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역내 단일 시장의 창출은 가능하게도 보였고 피

할 수 없는 대세라고도 생각했다. 이들은 유럽 단일 시장을 구축하는 수단으로서 유럽통합의 의의에 주목했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동안 유럽은 식민지 지배를 통해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시장 확대의 문제를 해소해 오고자 했는데 제 1차 세계대전 후 가속화되는 탈식민지의 상황에서 이제 이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다. 유럽통합을 통한 역내 단일 시장의 설립은 더욱 절실한 과제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유럽통합의 대의는 또한 장차 세계에서 차지하게 될 유럽의 위상과 관련하여 강조되었다. 양차 대전 사이에 미국, 일본의 상품 수출이 2배로 늘어나는 동안 유럽의 수출량은 절반으로 감소했다. 1919년과 1939년 사이에 미국의 산업생산은 150% 성장했고, 소련에서는 600% 성장했다. 이에 반해 유럽 국가들에서는 40% 정도의 성장을 보였다. 특히 미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은 유럽인들로 하여금 경쟁력이란 측면에서 특별한 두려움을 갖게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국의 눈부신 발전의 배경에는 단일시장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보기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베르사유 조약과 후속조약들을 통해 새로운 국가들이 등장하여 유럽의 시장은 더욱더 복잡하게 짜여졌다. 유럽 국가들의 총 국경선은 20,000Km를 넘어서게 되었다. 그들은 유럽이 민족 내지는 주권국가별로 분열·고립되고 부자연스럽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근본적인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즉, 그들은 경제적 민족주의의 결과로 인하여 그들이 희망하는 유럽의 역내 번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단일시장의 형성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유럽의 번영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럽자원의 공동개발과 단일시장의 형성이 관건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유럽이 거대한 경제공동체를 이루어내고 그 바탕위에서 공동의 정치기구를 소유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그들은 단일시장을 창출해냄으로써 모든 부문에서 생산의 증가와 저렴한 가격을 보장받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자동차, 자동기계 등은 수요의 부족으로 불황을 겪곤 하였는데, 이것을 완화시킬 것이며, 대량생산이 유럽 안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공황을 겪은 유럽인들에게 이러한 장점들은 대단히 매력적이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대로 제 1차 세계대전은 전선에 국한되는 국지전이 아니고, 모든 지역이 전쟁터가 되는 총력전의 성격을 띠었기에 대량생산을 위한 기술, 교통기관, 교통시설 등 기간산업이 혁명적으로 확충되고 대량생산체제가 어느 정도 갖추어

지기 시작하였다고 그들은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은 유럽 내 주권국가들 국경선의 존재의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당시 주권국가의 국경선내부에 한정된 시장으로는 대량생산체제와 기술의 발전을 통해 확대되는 경제를 더 이상 유지·발전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유럽의 각 민족국가들은 유럽대륙 이외의 국가들, 특히 미국과 일본에게 경제적인 경쟁력에 있어서 점점 추월당하고 그들은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유럽의 자본주의가 공산정권 소련의 침략 위험 앞에 직접적으로 놓여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유럽의 단일시장 형성과 유럽통합만이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연방주의, 기능주의, 단일시장 형성의 필요성 등은 유럽통합을 위한 별개의 동기와 목표와 방법이 아니라 긴밀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는 점을 깨닫는 선각자들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장 모네 (Jean Monnet)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단일시장 설립을 기능주의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이를 또한 연방주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력으로 삼고자 했다. 앞 장에서 설명한 제 1차 세계대전 전의 유럽통합 사상의 제 요인들이 전후에는 이들에 의해 서로 긴밀한 상호관계를 이루면서 하나의 유럽통합 사상으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시장원리와 지역공동체 창설을 통한 영구평화 정착의 구상이 맞물려 들어갔다. 이러한 측면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듯 제 2차 세계대전 후 장 모네가 기획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창설 과정에서 주요한 이론적 토대로 작용했다.

## 2-2) 파시즘의 등장과 제 2차 세계대전의 발발

그러나 이러한 유럽통합 이론과 운동의 구체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민족주의와 주권국가를 고집하는 유럽인의 성향도 뿌리 깊게 남아있었다. 앞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유럽에서 민족주의 내지는 국가주의 경쟁은 19세기 후반기부터 독일, 이탈리아의 통일과 함께 그 절정에 이르렀다. 국가주의 경쟁은 제국주의 경쟁으로 이어졌고, 제 1차 세계대전을 통해 폭발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베르사유 체제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베르사유 체제는 주권 국가 시스템에 기초한 국제적인 통제와 견제, 세력균형 원리를 통해 전쟁의 원인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구체적

으로 말해 패전국인 독일을 전쟁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독일의 힘을 약화시켜서 전쟁의 재발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독일의 재도약을 막기 위해 독일이 감당키 어려운 제재조치를 취했다. 베르사유 체제로 인해 특히 독일인들의 불만은 극도로 고조되었다. 이것은 독일 민족주의를 심화시켰다. 베르사유 체제를 주도한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감정대립이 고조되었다. 이탈리아는 제 1차 세계대전 후 민족주의적 수정주의 전략을 대표했으며 후발 제국주의 세력을 표방했다. 이탈리아 인들은 베르사유 조약에서 결정된 국경선의 확대·수정과 유럽의 해외 식민지 재분할이 이탈리아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를 원했다. 베르사유 체제는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국에 가담했던 이탈리아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였다.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는 그들의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파시즘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설득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시즘 세력은 1920년대 초 이탈리아에서 정권을 장악했고, 독일에서는 대대적인 정치적 변동을 일으켰다. 1929년과 1930년대 초 경제공황을 거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유럽에서 팽배하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파시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독일 국경선을 전쟁 전의 상황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파시즘 세력들은 기존의 국제질서 즉,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를 선점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 즉, 국경선의 수정과 자본주의 국가 간 경쟁에서 필수적인 생존조건인 원자재 공급지와 판매시장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국가 사회 전체를 통제체제로 편성하고 여기에서 얻어진 국가의 힘으로 이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독일 사회 내에서 자급자족을 달성하겠다는 “피와 땅”(Blut und Erde)의 사상 그리고 유럽 내 독일 민족을 모두 포괄하는 범게르만 국가를 수립하고, 동유럽 내에서 생활공간을 확보하겠다는 목표 등이 이를 대변했다. 이러한 목표를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와 함께 실현하려는 시도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폭발한 것이다.

그리하여 앞 절에서 언급한 유럽통합운동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이탈리아의 파시즘 그리고 독일의 나치즘이 정권을 잡고 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었다. 독일 나치는 “유럽의 신질서 (New Order in Europe)”를 선전하고 인종주의에 의거한 유럽의 재편성을 강조하면서 그 실현방법으로 전쟁을 선택했다.

### 2-3) 반파시스트 저항운동과 유럽통합 사상 및 운동의 전개

인종주의 이론에 의거한 학살이 자행되는 등 반인륜적 범죄들이 저질러지면서 제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었다. 그동안의 유럽통합 운동가들은 운동에서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었으며 폭넓은 대중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음을 반성하였다. 그런가 하면 반파시트 저항 투쟁이 곳곳에서 조직되었고 이들 저항운동가들 중에는 파시즘과 나치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전쟁의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유럽연방주의 이론을 더욱 체계화 하고 실현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탈리아의 저항운동가이며 연방주의자들인 스피넬리 (Altiero Spinelli)와 로시 (Ernesto Rossi)는 벤토테네 (Ventotene) 섬에서 구금 생활을 하면서 유럽통합을 위한 선언문 (Ventotene Manifesto)을 작성하였다. 그들은 이 글에서 파시즘을 민족주의, 제국주의, 자본주의가 극단적으로 왜곡되고 물질만능 주의에 탐닉한 결과로서 인류문명 위기의 징후로 진단했다. 그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연방주의 유럽통합과 사회개혁을 주창했다. 당시 연방주의를 설파한 또 다른 중요한 인물로서 독일의 저항운동가 몰트케 (Helmuth von Moltke)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영국을 포함하는 대서양에서 우랄까지 그리고 북유럽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유럽연방의 창설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유럽 각 국가들은 연방내의 주 (州)로 새롭게 편성되어 연방에 주권을 양도하고 경제정책 등에서 자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지역자치를 활성화하고 단일 주권 하에 놓이는 유럽의 연방체제만이 독일 나치가 보여주는 유럽의 민족주의 그리고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폐해를 시정하고 유럽을 진정한 평화와 인권의 공동체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그는 이러한 유럽연방의 형성이 세계평화체제를 구축해 가는 한 단계가 된다고 생각했다. 이탈리아의 저항운동가이며 연방주의자인 에이나우디 (Luigi Einaudi)는 온전한 유럽연방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일화폐의 창출과 중앙은행 그리고 연방경찰과 연방군대의 창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공동의 문화정책과 산업정책을 구상했다. 당시 프랑스의 저항운동 단체였던 ‘유럽연방을 위한 프랑스 위원회’는 유럽시민권의 창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프랑스와 유럽을 파시스트 그리고 나치 침략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프랑스인과 양심적인 독일인을 포함한 유럽인들을 유럽연방으로 조직해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제 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체제는 아무런 대책 없이 민족주권국가원칙을 유지시켰고 이것이 파시즘의 정권장악 그리고 2차 대전을 야기시켰다. 경제·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접국가 간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에 민족주의 감정이 강화되었으니, 이것이 각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보았다. 지금까지의 유럽은 과거 관세장벽들에 의해 작은 나라들로 분열되어 있어서 질식할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유럽의 환경에서 히틀러가 복수심에 불타고 있던 독일 민족주의의 정서를 등에 업고 집권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승자 간의 합의나 승자가 패자에게 강요한 평화안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믿었으며, 영구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제영역에서 국가주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차 대전 후의 세계질서 즉, 베르사유 체제의 문제점을 베르사유 조약이 민족국가 단위의 통치체제 개념을 수용함으로써 민족주의를 강화시켰다는 데서 보았다.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성립된 국제연맹규약은 국가주권의 개념을 제한하기보다는 민족국가들을 완전한 주권을 가진 통치체제 단위로 승인함으로써 전쟁의 위험을 증대시켜 전쟁의 위험을 증폭시켰다고 보았다. 즉, 이들은 베르사유 체제가 전쟁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았다. 이들 연방주의 유럽통합론자들은 일반 유럽인들이 오랫동안 세력균형원리에 의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점점 그들은 이 원리에 대해 그리고 더 나아가 주권을 가진 민족국가들의 존재의의에 대해 회의론을 품게 되어 감을 인식했다. 이들은 일반 유럽인들이 각 민족국가들이 주권을 가지고 각각의 국가이성(국가이익)을 추구하는 한 평화가 보장될 수 없으며,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한, 인권의 보장도 민주주의의 번영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돕고자 하였다. 이들 연방주의 반파시트 저항 운동가들은 전후에 민족주의 전쟁의 원인 지역인 알자스-로렌의 중심 스트라스부르에 유럽의회 등, 유럽통합 기관들을 창설함으로써 이 지역을 유럽 평화의 상징 센터로 만들자는 의견도 주고받았다.

저항운동에 헌신하면서 연방주의 유럽통합의 전후 질서를 수립하고자 했던 독일인 괴르델러 (Carl Goerdeler)는 그 실천 방안으로서 영구대표위원회 (영구연방위원회)의 창설과 이의 활동을 통한 통일된 법률을 제정하고, 관세동

맹을 결성하며, 통합 운송제도, 공동화폐와 상호 예산통제, 강제 중재 (유럽 법원)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럽방위군, 유럽경제이사회, 유럽연방의회 설립을 그 최종 단계로 상정했다. 여기에서 그는 유럽연방의 창설은 세계통합 과정의 한 단계임을 분명히 하고 유럽은 세계질서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이유를 그는 다음과 같이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요약했다. “국가 자체가 궁극의 목표가 아니다. 국가는 다만 국민들의 삶과 복지를 조직하는 수단일 따름이다. 국제관계에서 도덕에 관한 이중의 잣대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외교정책은 다른 민족들의 이익과 서로 다른 자질들을 존중해 주고 그들을 기꺼이 도와주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영국의 현직 수상 처칠 (Winston Churchill) 이 영국과 프랑스가 통합되면서 영방주의 유럽합중국을 이루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연방주의 운동은 그 정점에 달했고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을 목전에 둔 것으로 보였다. 나치독일에 의해 자신의 국가가 점령되면서 런던에서 망명정부를 세우고 있던 유럽의 지도자들도 이 연방주의 운동에 가담했다. 이 연방주의 사상의 스펙트럼은 대단히 다양하고 넓었다. 통합된 유럽이 어떠한 사회여야 하는가에 대해 다양한 진보적인 관점과 다양한 보수적인 관점이 공존했다.

#### 2-4) 전후 구상으로서 독일문제의 해결과 유럽통합

제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동안 유럽통합의 목표와 이론들은 독일문제의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를 축으로 하는 초국가주의의 유럽통합사상이 큰 공감을 얻기 시작했다. 프랑스 내에서도 독일을 제재하고 고립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독일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통합된 유럽 안으로 끌어들이므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크게 대두되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인민전선 내각을 이끌었고 나치스 독일에 대한 저항운동의 상징적인 지도자이며 제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질서를 수립하는데 탁월한 정치지도력을 발휘했던 블룸(Léon Blum)은 증오를 증오로써 해결할 수 없고, 폭력을 폭력으로써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독일의 침략성을 평화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 독일을 유럽 국제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독일을 유럽의 어둠 그리

고 프랑스를 유럽의 빛으로 이해하고 독일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었다. 대혁명 이후 프랑스를 유럽의 머리 그리고 독일을 심장으로 이해하면서 양국의 화해와 협력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세력(대표적 인물: 빅토르 위고)의 대독 정책관이 또한 정립되어 왔다. 블룸의 사고는 위고로 대표되던 자유주의적 대독 정책의 전통에 서있었다. 그는 진정한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와 협력에 기초한 유럽통합을 이루어야 하고 유럽통합을 통해서 독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유럽통합사상의 관점들은 현재 동북아 지역의 남북문제에 대해서 한중일 3국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여러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하면서 북한을 이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한중일 사이의 여러 갈등들을 블룸의 사고와 같은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민족의 분단 문제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주변국들의 갈등과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정책의 개발 못지않게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의 의식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겠다. 이러한 측면은 구성주의 이론과 접목해서 보다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 3. 제 2차 세계대전 후 유럽통합 사상 및 운동의 전개와 제도적 실현 노력

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자 유럽통합을 추구하던 저항 운동가들은 이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그런데 전쟁 영웅이 된 영국의 수상 처칠 (Winston Churchill) 이 1946년 9월 취리히 (Zurich University)에서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합중국 창설을 제안하였다. 그는 그의 연방주의 유럽통합 주장이 전쟁동안에 비하면 매우 약해졌음을 알 수 있게 했다. 왜냐하면 전쟁동안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통합해야 한다고 함으로서 영국의 강력한 참여를 시사했는데 전후에는 프랑스와 독일이 통합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영국이 빠지기 때문이었다. 추후에 처칠이 밝힌 바 전쟁동안 영국과 프랑스가 통합되어 유럽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반파시트 저항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프랑스 망명정부와 프랑스 내 레지스탕스들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 라고 했다. 영국은 궁극적으로 유럽통합에 대한 관심보다는 영국과 영연방 그리고 미국과의 연계가 중요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 소련, 영국의 3대 세계 세력권 형성해야 했다고 회고했다.

연방주의 유럽통합 운동가들은 1948년 네덜란드의 헤이그 (Hague)에 모여 유



협의회를 조직하고 유럽통합을 위한 제도적인 작업에 착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대와는 반대로 영국이 이에 대해 대단히 소극적이고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아 그 이듬해 1949년에 유럽평의회를 (Council of Europe) 조직하고 그 본부를 알자스-로렌의 중심 도시 스트라스부르에 설치하였다. 스트라스부르에 설치한 이유는 전쟁의 원인 지역을 평화의 상징지역으로 하겠다던 뜻을 실천하고자 한 것이었다.

알자스-로렌 지역을 갈등의 원인으로부터 화해와 평화의 공동 상징지역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유럽인들에게는 국가주의에서 초국가주의로 (또는 민족주의에서 초민족주의로)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독일과 프랑스에게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차원에서 알자스-로렌 지역의 소유는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졌다. 그래서 그것의 소유를 위해 양 국가는 지속적으로 쟁탈전을 펼쳤다. 그런데 초국가주의 사상에 의거하여 유럽통합을 수행하면서 알자스-로렌 지역은 유럽의 상징지역으로 설정되었다. 알자스-로렌 지역을 갈등의 원인으로부터 화해와 평화의 공동 상징지역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유럽인들에게는 국가주의에서 초국가주의로 (또는 민족주의에서 초민족주의로)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유럽평의회가 스트라스부르에 설립된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럽통합의 방법론과 과정은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이웃 국가들의 여러 갈등과 대립의 원인들을 공동의 운명의식을 갖고 풀고자 하는 발상과 의식의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남북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이해관계 조율이라는 측면에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북아 및 동아시아 통합 사상 및 운동은 그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이러한 공동의 운명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이미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공동의 운명의식은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는 공동의 경제정책 들을 입안하고 실시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냉전이 시작되고 미국과 소련이 세계의 운명을 주도하는 현실에서 이들 연방주의 사상이 쉽게 현실에서 실현될 수는 없었다. 전후 처리 과정에서 유럽평화 파괴의 원인으로 규명된 독일이 처음에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4개 지역으로 분할되고 나중에는 서독과 동독의 2개 지역으로 분단되었다. 냉전의 결과 유럽이 또한 동·서로 분단되었다.

이러한 유럽의 동·서 분단을 막고 평화와 공동번영을 실현해야 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연방주의 유럽통합운동가들은 제 3세력으로서의 연방주의 유럽통합을 강력히 주창하였으나 그들의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일반 사람들의 관심

은 전후 복구와 안정 그리고 의식주를 포함한 생활고의 해결이 급선무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경제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의 정책이 대단히 중대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장에서 설명했듯 연방주의, 기능주의, 단일시장 형성 이론 등을 복합적으로 묶어서 유럽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 장 모네가 중대한 활약을 하였다. 그의 제안으로 프랑스의 외무장관 로베르 슈망 (Robert Schuman)은 석탄철강공동체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프랑스, 이탈리아, 서독, 베네룩스 3국의 6개국이 이 석탄철강공동체를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독일이 다시는 독자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자 했다. 즉, 이러한 조치는 유럽내부에서 제기될 전쟁 가능성을 차단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한 의도에 기인했다. 1950-1952년 사이에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가 창설되었는데, 이는 당시 전쟁 무기를 위해 중요한 원자재인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전쟁을 방지하고 이 공동체를 기반으로 운송공동체, 경제공동체, 정치공동체 등으로 파급효과를 일으키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파급효과를 통해 유럽통합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하스 (Ernst B. Haas)가 추후에 신기능주의 이론으로 정립했다. 그러나 이러한 파급효과는 기대한 만큼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발생하지 않았다. 1957년 로마조약에 의거한 경제공동체 (EEC)의 창설도 ECSC로부터의 파급효과의 결과라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파급효과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장 모네의 유럽통합 방법이 제 2차 세계대전 후 대전 후 대세로 자리 잡았다. 장 모네의 유럽통합 방안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서유럽통합 구상과 타협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리하여 제 2차 세계대전 후 유럽통합의 기본 기초를 이룰 수 있었다. 유럽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가속화하고 있는 탈식민지화 과정에서 유럽단일시장의 형성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는데 장 모네 역시 이 점을 그의 유럽통합 방안에서 고려하고 있었다. 1956년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에 대한 국유화 선언을 하였다. 소위 수에즈 운하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프랑스의 식민지 경영에 크게 타격을 입힐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사건들은 추후 막을 수 없는 대세이고 그 대안을 유럽에서 찾아야 했다. 장 모네의 유럽통합 방안에는 이러한 현실도 고려되면서 진화되어 갔다.

다른 한편에 이러한 유럽공동체들이 형성될 수 있었던 데에는 분단된 독일 중 서독이 나치즘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민주화 그리고 유럽통합의 대의에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관철시켰기 때문이다. 이 지역공동체 내에는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자문의회가 스트라스부르에 자리 잡고 이는 후에 유럽의회로 발전했다. 스트라스부르에 자리 잡은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 4. 유럽통합과 독일문제의 상관관계

앞에서 제 2차 세계대전 중 연방주의 운동은 독일문제 해결이라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추진되었음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제 2차 세계대전 후 연방주의 운동자들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 정황도 앞에서 설명하였다. 독일문제 해결과 유럽통합의 미래는 승전 연합국의 정책에 크게 달려 있었다. 그럼에도 독일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에 있어서 독일국민들과 이웃 국가들의 정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오늘날 우리가 아는 실질적인 유럽통합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독일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직접적으로 히틀러 치하 독일이 유럽정복을 목표로 전쟁을 일으키고 제반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자행한 독일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독일문제(deutsche Frage)”란 유럽 중앙에 자리 잡고 뒤늦게 근대화한 독일이 무력으로 유럽의 주도권을 쟁취하려는 시도로 인해 유럽의 질서가 교란되는 현상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극단적으로 추구하여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히틀러 통치 하의 독일이 2차 대전에서 패전한 결과 분단되었는데 분단된 상황도 “독일문제”라는 개념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독일문제는 유럽 내 민족주의가 독일적인 특수상황에서 극단적으로 왜곡된 한 형태로 인식되고, 또한 독일민족이 분단의 역사를 감수해야하는 상황, 그로 인하여 불안정한 유럽의 현상을 일컫는다고 하겠다. 독일로 인해 전쟁의 피해를 겪었던 유럽의 이웃나라들은 늘 독일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심하였다. 특히 프랑스가 그러하였다.

역사적으로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를 보면, 유럽 내 주도권 경쟁과 복수에 복수를 부르는 원한관계로 점철되어있다. 1618년에서 1648년까지 30년 동안 수행된 독일 내의 신교와 구교 간의 전쟁에서 프랑스는 독일 황제 권을 약화시켜 독일통일을 방해하기 위해 신교 편을 지원했다. 나폴레옹 프랑스의 독일 정복과 지배, 비스마르크 독일의 프랑스 점령과 프랑스의 영광과 권위의 상징인 베르사유 궁에서 독일통일을 각인하는 독일황제즉위식, 1차 대전 후 베르사유

궁에서 독일의 굴욕적인 항복조인과 엄청난 전쟁책임 부과, 히틀러 독일의 프랑스 유린 등이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양국가가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웃국가들 특히 베네룩스 3국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

나치 체제의 성립배경에 대한 독일 지식인들의 반성은 일반대중의 광범한 지지를 얻었다. 즉, 제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장래를 염려하는 대다수 독일인들은 나치 시대를 반성하면서 독일의 권위주의적 전통과, 인종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독일인들은 이러한 과거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독일을 건설하는 길은 유럽 속의 독일, 즉 유럽통합을 통해 확고히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서독에서 보수 정당으로서 재건된 기독교민주당 (CDU) 까지도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주장하고 일부의 사회민주주의 요소를 강령으로 채택했다. 이와 아울러 소련 공산주의 독재체제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적인 질서와 제도를 정착시켜야 된다는 결의가 대세를 이루었다. 그들은 소련의 스탈린 독재체제를 혐오하였다. 소련 체제는 나치 체제처럼 계획경제와 권위주의적 관료체제 그리고 군부와 경찰이 그 독재체제의 핵심요소라고 파악했다. 그들은 민주적 자유질서를 위해서 사회적 정의에 바탕한 자유경쟁체제와 국가가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회시장 경제 제도가 독일사회에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이리하여 서독의 독일인들이 유럽통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런가 하면 승전연합국의 정책들도 독일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독일과 화해 그리고 유럽통합을 통한 독일문제 해결을 생각하는 프랑스인들이 있었으나 제 2차 세계대전 후 다수의 프랑스인들은 베르사유 체제에서처럼 독일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독일영토의 일부를 분리해내고 독일의 복구를 봉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나치 독일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독일의 전쟁능력회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미국, 소련, 영국 그리고 프랑스는 독일을 4분할 점령하였다. 여기에 프랑스의 입장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전후 세계질서의 방향을 놓고 미국과 소련사이의 대립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즉 냉전의 진전에 따라 소련 점령지역과 통합된 미·영·프 점령지역으로의 2분할만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소련은 동유럽 국가들에서 붉은 군대와 비밀경찰의 힘을 빌어 공산정권을 수립해 나갔다. 미국은 소련의 이러한 동유럽정책을 소련의 영구혁명 팽창정책이라 비난하며 대(對) 소련 봉쇄정책을 펼던 반면, 소련은 이러한 미국의 태도를 제국주의적 간섭이라 응수했다. 이러한 미국과 소련의 대립은 냉전 상황을 심화시켜 갔다.

이렇게 상대국으로부터 각각 위협을 느끼게 된 양국은 패망한 독일이 상대방의 영향력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또는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여기게 되었다. 제 1·2차 세계대전에서 나타난 독일의 잠재력에 비추어 볼 때, 독일이 어느 한 세력권에 밀착되는 것은 그 세력권의 세계지배를 가능하게 하고 상대방세력권의 몰락 내지는 쇠퇴를 의미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외교정책에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한 소련주재 외교관 케난(G.F. Kennan)의 미국국무장관 번즈에게 보낸 전문을 분석해 보면, 미국은 특히 소련이 독일에 대해 과중한 전쟁배상을 요구함으로써 독일에서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불안정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점에 주목했다. 소련이 서유럽에서도 사회주의 혁명을 유도하여 독일을 기점으로 전 유럽을 제패하고자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미국은 미·영·프 점령지역의 독일을 통합·재건하여 이를 방파제로 한 서유럽의 대(對) 소련 봉쇄체제를 구상하게 되었다. 케난(G.F. Kennan)과 클레이튼(W. Clayton)등 미국의 대외 정책 입안자들에 따르면, 이 대(對) 소련 방위체는 미국의 핵 독점과 서방의 경제력 우위에 기초되어야 했다. 이를 위해 서유럽 국가들은 통합되어야 하고 미국은 이들 국가들을 위해 군사적, 재정적 그리고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지도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서유럽의 신속한 재건을 위해서는 유럽중앙에 자리 잡은 잠재적인 산업경제대국 독일의 재건은 필수 불가결했다. 또한 통합된 서유럽으로 독일을 편입시킴으로써 독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독의 재건에 대해서 안보상의 이유로 결연히 반대하던 프랑스는 이 점과 관련하여 결국 동의하게 되었다. 이는 서유럽통합이 독일의 분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유럽통합을 위한 대(對) 소련 봉쇄 그리고 독일문제의 해결 외에도 미국의 대외정책 입안자들의 많은 수가 이 통합된 거대한 시장은 미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았으며 서유럽 국가들의 부흥을 그들 생존의 전제조건으로 여겼다. 프랑스도 미국의 원조를 받아 하루 빨리 경제를 재건해야 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서유럽이 복구되어야 했으며 이를 위해 미국의 원조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했다. 독일은 독일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해 제 2차 세계대전 책임문제 때문에 4개 지역으로 분단되었는데, 냉전의 영향으로 2개 지역으로 통합되면서 동·서로 분단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동·서로 분단된 독일 중에서 서독은 유럽에서 차지하는 지리적 위치와 경제적 구조로 인해 서유럽통합에 속하게 되며 그로 인해 서유럽통합의 발단과 동시에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달리 말해 냉전 속에서의 서유럽통합은 독일의 분단과 유럽의 분단을 전제하면서 새로운 독일문제와 유럽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음을 의미

한다. 이는 서유럽통합이 독일문제 해결과 냉전 대처의 핵심 내용이었음을 의미한다. 냉전과 더불어 서독이 서유럽통합에 참여하게 되었다. 독일의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이웃 나라들에게 독일문제의 위험성을 크게 완화시켜 주었다. 냉전시대 서유럽통합은 반공의 수단이면서 독일문제 해결의 방안이었다.

이는 독일통일은 생각도 하기 힘들 정도로 그 분단이 구조화되고 제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해 독일분단은 영구분단을 의미했다. 그러나 향후에 독일은, 특히 서독은 이러한 상황을 역으로 독일통일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러한 서유럽통합을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발판으로 서독을 후원하는 배경으로 활용했다. 서유럽통합을 서독의 발전의 기틀로 삼고 서유럽을 넘어서 유럽통합을 추진하고 그 가운데서 독일통일을 꾀하였다. 연방주의 유럽통합 운동은 냉전의 전개와 더불어 큰 타격을 받지만 그 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했다. 그 중심에는 스피넬리 (Altiero Spinelli) 가 있었다. 유럽통합의 사상과 운동이 냉전 시대에 반공의 수단으로 전략한 것을 극복하고 유럽전체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러한 연방주의 노력이 일정 부분 실질적인 유럽통합이 회원국들의 이해관계 불일치로 난관에 부딪칠 때에도 지속적인 통합의 동력으로 구심력으로 작용했다. 이 내용들은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속한다.